

압수된 범죄수익 400억, 검찰 손에서 사라졌다

광주지검, 비트코인 320개 분실 사실 뒤늦게 확인 국가 가상자산 관리 부실 빈축…검찰 책임론 확산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가상화폐) 320개를 분실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현 시세 기준 약 4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국가가 보관하다 잃어버린 초유의 사태로, 검찰의 압수물 관리 능력과 책임 의식이 눈총을 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올해 초 범죄자금으로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상당수를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분실된 비트코인 320개는 광주경찰청이 2021년 11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딸 A씨(여·36·수감 중)의 전자

지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다.

A씨는 부친 B씨와 함께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태국에서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비트코인을 이용한 새로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했고, 이후 수감되자 사이트 운영을 딸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비트코인 4000개 수준으로 추

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전자지갑 6개에서 총 1797개의 비트코인을 확인하고 모두 압수하려 했으나, 누군가 접속해 대부분을 탈취하면서 320개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2023년 1월 A씨 신병을 검찰에 넘기며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도 함께 보관했다. 이때 검찰로 넘겨진 것은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접근·처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폴드월렛’이라는 이동식 저장장치였다. 해당 저장장치에는 지갑 주소 3개와 각각의 비밀번호, 니모닉 코드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이 관리하던 비트코인 320개는 2년 넘게 유지되다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누군가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압수 과정에서 생성한 3개의 지갑에 나누어 보관돼 있던 비트코

인이 단일 지갑으로 한꺼번에 옮겨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검찰 인사이동 이후 담당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압수 비트코인 현황을 확인하던 중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에 분실한 사실을 올해 초에 인지한 것이다.

분실 사실이 드러난 시점은 A씨의 유죄가 확정된 직후다.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압수된 비트코인 320개에 대한 몰수 처분도 확정됐고, 국고 귀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뒤늦게 분실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내부 검찰과 수사를 병행하며 분실된 비트코인 회수에 총력을 기

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분실된 비트코인이 아직 현금화되지 않아 추적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설명도 내놔다.

그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의 관리 소홀로 자산이 유출됐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삼종의 보안이 요구되는 가상자산 관리에서 기본적인 통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관련자에 대한 책임 규명이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와 검찰을 통해 사건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가상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7:35	달달	12:47
☁️	예보	17:56	달달	02:58



광주	☀️	-5~3
목포	☀️	-3~1
여수	☀️	-3~5
순천	☀️	-5~4
구례	☀️	-6~3
광주	☀️	-4~3
함평	☀️	-3~4
진남	☀️	-3~4
목포	☀️	0~3
고흥	☀️	-5~5
진남	☀️	-2~1

목포	밀물(고)	09:31 / 21:31
	썰물(저)	01:53 / 15:06
여수	밀물(고)	04:42 / 16:49
	썰물(저)	10:54 / 23:09

“키퍼 사령, 불법 주정차 화물차도 과실”

법원, 15% 책임 비율 인정

불법 주정차로 도로 시야를 가린 화물차에도 키퍼 사망사고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중민 부장판사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7월20일 오전 5시35분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발생한 키퍼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에서 시속 50km로 주행하던 버스가 키퍼와 충돌했고, 키퍼를 타던 A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과실 비율은 버스 70%, 키퍼도 30%로 산정됐다. 이후 버스 조합 측은 사고 지점 인근

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가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했다며 화물차 조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화물차 조합은 사고가 전적으로 버스의 과속과 키퍼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차로 부근에 정지된 화물차로 인해 시야 확보에 일정 부분 장애가 있었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키퍼 운전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사고 과실 비율을 버스 운전자 55%, 키퍼 운전자 30%, 화물차 운전자 15%로 새롭게 산정하며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역시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화물차 조합이 버스 조합 측에 750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대병원 랜섬웨어 공격…전산망 복구 완료

전남대학교병원 이 랜섬웨어로 분류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전산망 긴급 복구를 마쳤다.

2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 오전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검사 결과를 진료실에서 원격으로 관독하지 못해 의료진이 촬영실로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 수술과 진료의 차질, 환자 개인 정보 유출 등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망 복구는 악성파일을 찾아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당일 오후에 마무리됐다. 악성파일은 행정부서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병원 전산망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랜섬웨어는 시스템에 침투해 저장된 자료를 암호화한 뒤 복구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범죄에 이용되는 악성 프로그램의 의미한다. 이신하 기자 goback@



새학기 앞두고 교복나눔장터 분주 새학기 앞두고 27일 광주 북구 새마을회 상설교복나눔 장터에서 김옥자 북구새마을 부녀회장과 회원들이 기증받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교복 판매는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하며 판매 수익금은 광주북구청학에 기탁한다. 최기남 기자 bluesky@

“자연재해 아냐”...‘인재’ 정황 확인 수사 본격화

광주경찰청, 7차례 압수수색·전자정보 10만점 확보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경찰이 인재(人災) 정황을 포착,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경찰은 직접적인 붕괴 원인뿐 아니라 설계·시공·감리·관리 감독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투 트랙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수사분부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7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전자정보, 관련 서류 1900쪽, 전자정보 10만점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입건자는 8명이 추

는 출구금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입건 대상에는 시공사·하청업체 관계자와 법인 등이 포함됐으며, 발주처인 광주시 공무원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붕괴의 직접 원인 규명과 함께 왜 특정 공사 현장에서 위험이 반복됐는지 구조적 원인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무자격 시공 여부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관행적 문제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설계사 자체에 대한 입건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구조 설계의 적정성은 감정 결과를 토대

로 판단할 방침이다.

합동 감정 결과는 오는 2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감정 결과가 나오면 대로 붕괴 원인과 과실의 경중을 구체화하고,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병현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설계 변경 과정, 시공 방식, 감리의 역할과 실효성, 발주처의 관리·감독 체계까지 핵심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전문기관 감정 결과를 종합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간을 일정하게 딱찰다 정의할 수는 없다. 사안에 따라 내년 초까지 수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고 이해찬 전 총리 5·18민주광장 합동분향소

“민주주의의 거목, 광주가 영원히 기억합니다”

현화·목념 속 애도 발길…방명록에 추모글 빼곡

시민들 “5·18 진상규명·광주 아픔 함께한 정치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앞장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27일 오전 9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합동분향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제단 위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영정 사진과 국화꽃이 쌓였고, 분향소 안은 엄숙함이 묻어났다.

추모객들은 분향소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차례로 방명록에 이름과 추모의 글을 남긴 뒤 국화를 올리고 고인의 영면을 기렸다.

최기현씨(63·북구두암동)와 김동우씨(50·광산구 신장동)는 “1988년 5·18 청문회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고 발표 명령자를 찾고자 노력하는 고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며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는 데 앞장서며 광주시민의 아픔을 달랬다”고 말했다.

방명록에는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선구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시민들의 추모 문구가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향을 피우거나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며 애를 갖쳤다.

절을 올린 강병권씨(54·남구 노대동)는 “정치계의 큰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찾아 뵈고 조의를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한 축을 형성한 인물인 만큼 이 전 총리에 대한 업적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분향소 인근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 별세를 깊이 애도합니다’, ‘고 민주평

화통일자문화회 수석부의장님 명복을 빕니다’ 등의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도 분향소를 찾아 이 전 총리의 명복을 빌었다.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은 제단 앞에 국화를 올린 뒤 묵념을 이어갔다.

한편,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합동분향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현화와 묵념으로 추모할 수 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서울대 재학 시절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27일 광주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 광주 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른 1세대 운동권 출신으로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민주주의의 한 축을 형성한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며 입법부와 행정부를 거쳤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세종시 건설 등 굵

직한 국정 현안을 총괄한 ‘책임총리’로서 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가 폭력의 진실 규명에 앞장섰으며, 광주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역사’로 규정한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